국제 농업 정보(2021. 12.): 유럽

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

1 농식품 지리적 표시제[1)]

■ 유럽연합이 운영하는 지리적 표시제는 세 가지로 구분되며, 상표권과는 달리, 지역 내에 있는 생산자가 특정 기준을 만족하면 사용할 수 있는 집합적인 권리를 의미함.

- 1) 원산지 명칭 보호(Protected Designation of Origin, PDO): 와인과 식품에 부착할 수 있으며, 생산부터 가공까지 모든 단계가 특정한 지역에서 이루어진 것을 의미함.
- 2) 지리적 표시 보호(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PGI): 와인과 식품에 부착되며, 생산 및 가공의 한 가지 이상의 특정 단계가 특정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함.
- 3) 증류·가향주의 지리적표시(Geographical Indication of spirit drinks and aromatised wines, GI): 생산과정 중 최소 한 단계(예: 증류)가 특정한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함. 하지만 원료가 지역 내에서 생산될 필요는 없음.
- 지리적 표시제는 아니지만 비슷한 인증제도로 Traditional Specialty Guaranteed(TSG)가 있음. 이는 생산과정에서 전통적 특성(traditional aspects)이 반영된 경우(생산방식, 구성 등) 부착이 가능함.

| 유럽연합 지리적표시제의 종류 |

지리적표시제			지리적표시제 아님
원산지 명칭 보호(PDO)	지리적 표시 보호(PGI)*	증류·가향주의 지리적 표시(GI)*	전통 특산품 보증(TSG)

자료: https://ec.europa.eu/info/food-farming-fisheries/food-safety-and-quality/(* 동일 표시 사용)

1) 유럽의회조사처의 "Revision of the EU legislation on geographical indications of agricultural and food products"(2021.10.28.)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https://www.europarl.europa.eu/thinktank/).

국제 농업 정보(2021. 12.): 유럽

■ 지리적 표시제를 통해 유럽연합은 농촌 및 농민들에게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킴.

- **(농민과 생산자를 위한 공정한 경쟁)** 가치사슬 내에서 농민과 생산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게 도와줌.
- **(지적재산권의 보호)** 유럽연합 내에서 지리적 표시제를 통해 지적재산권의 보호 효과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유럽연합 국가 간 혹은 유럽연합 외부와의 교역보다, 내부에서의 교역에서 더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남.
- **(유럽연합 시장의 통합)** 여러 회원국에서 공통된 기준을 통해 무역을 진행하도록 하여, 유럽연합 시장의 통합을 촉진함.
- **(소비자들에게 명확하고 신뢰성 높은 정보 제공)** 소비자에게 넓은 범위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농민과 생산자에게 공정한 수익 지급)** 지리적 표시제를 활용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농민과 생산자들은 가격 프리미엄과 추가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음. 하지만 외국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없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농촌지역에 긍정적 영향)** 식료품 분야의 고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며, 관광 수익 또한 얻을 수 있음.
- **(제3국에 대한 영향)** 제3국의 가치사슬에서는 유럽연합의 지리적 표시제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시장 점유율이 낮기 때문임.

■ 지리적 표시제의 사후평가를 바탕으로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정된 법안이 제출될 예정임.

- 2018에 발표된 지리적 표시제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공동농업정책에 맞추어 수정될 필요가 있음.
- 2021년 4분기에는 새로운 지리적 표시제 법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됨. 이는 유럽연합의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략을 반영하여, 지금까지 연구된 지리적 표시제의 영향을 바탕으로 법안을 수정하고자 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1.11.15.).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신 EU 기후적응 전략 주요 내용[2)]

〈개요〉

■ EU는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 2월 '신 EU 기후적응 전략[3)]'을 발표함.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기후변화 완화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적응도 중요하며, ❶ 영리한 적응, ❷ 체계적 적응, ❸ 신속한 적응 및 ❹ 국제적 행동 강화를 핵심 전략으로 제시함.

■ 동 전략은 건축, 순환경제 등 유럽 그린딜의 세부정책과 병행 운영될 계획이며, EU 정책금융기관이며 기후은행인 EIB의 향후 금융지원 방향에도 영향을 미침.

〈신 EU 기후적응 전략 주요 내용〉

EU는 기후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사회·경제적 위험에 대비하고 2050년까지 완전한 기후적응 역량을 갖추기 위해 2021년 2월 '신 EU 기후적응 전략'을 발표

■ 온실가스 배출 감소 등 기후변화 완화(Mitigation)는 이미 진행 중인 기후변화의 악영향을 방지할 수 없어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을 위한 역량 확보가 중요함.

- 기후변화 적응은 ❶ 미래 인적·자연적·물적 손실 회피, ❷ 생산성 증가 등 경제적 이익 창출, ❸ 사회·환경·문화적 혜택 등 3가지 효과(Triple Dividend)를 창출함으로써 기후대응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탄소중립 이행과정에 필수적임.

- 한편, 기후변화 완화는 2017~2018년 글로벌 기후금융의 93%(연평균 5,370억 달러)를 차지했으나, 기후변화 적응은 5% 수준으로 저조함(Climate Policy Initiative(2019)).

■ 이에 EU는 동 전략을 통해 성공적인 기후적응을 위한 세부 전략 및 이행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기후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로서 역할을 강화할 계획임.

- 최근 EU 대내외적으로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의 빈도와 심각성이 증가하고 있어 기후적응을 위한 역량 강화가 시급한 상황임.

---

2)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에서 발간한 "신 EU 기후적응 전략의 주요 내용"(이슈 브리프, 2021.10.25.)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 · 작성함.

3) New EU Strategy on Adaptation to Climate Change는 2013.4월 발표된 EU의 기후적응 전략 및 이에 대한 2018.11월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보완되었으며, EU의 구체적인 기후적응 전략 등을 포함함.

국제 농업 정보(2021. 12.): 유럽

- EU에 따르면, 극심한 기후변화에 따른 역내 경제적 손실은 이미 연간 120억 유로 이상으로, 산업화 이전 대비 3℃ 이상 기온이 상승할 경우 연간 1,700억 유로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EU는 ❶ 영리한(Smarter) 적응, ❷ 체계적(More Systemic) 적응, ❸ 신속한(Faster) 적응 및 ❹ 국제적 행동 강화를 기후적응의 핵심 전략으로 제시

■ 영리한 적응, 체계적 적응, 신속한 적응을 위한 세부 전략 및 이행방안을 제공함으로써 기후적응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함.

- 더불어 기후적응 전략의 이행과정에서 국가·지역·노동자 간 기후변화 위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회원국 내 결속과 공정성도 강조함.

| 신 EU 기후적응 전략별 주요 내용 |

구분	세부 전략	EU의 이행방안
영리한 적응	① 최첨단 과학기술을 적용한 기후 의사결정	Horizon Europe, Digital Europe, Copernicus 등을 활용하여 기후 지식격차 해소 지원 등
	② 정확한 기후 리스크 데이터의 기록·수집·공유	데이터 기록·수집·공유의 기준 마련, Risk Data Hub를 통한 중앙 기록 지원 등
	③ Climate-ADAPT를 공식 지식플랫폼으로 활용	산발적 정보처리 메커니즘 통합 등
체계적 적응	① 기후적응 측정 기준 마련, 정책 일관성 유지	회원국 협력으로 국가 기후적응 전략 지침 마련 등
	② 지역별·개인별 기후적응의 공정성 증진	지역 기후적응 전략 및 지원기구 운영 등, ESF+, Eramus+ 등 프로그램을 통한 근로자 지원
	③ 국가 재정 프레임워크에 기후적응 내용 반영	공공 재정에 미치는 기후 리스크의 잠재적 영향 측정방법 개발, 역내 기금과의 상호보완 강화 등
	④ 자연기반 솔루션(Nature-based Solutions) 촉진	자연기반 솔루션의 재무적 영향을 활용한 금융기법 개발 등
신속한 적응	① 기후적응 지원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 제고	EU Taxonomy2)의 지속 개발 등
	② 인프라 구축을 통한 기후적응 리스크 경감	중요 인프라 건축·개조 시 기후적응 기준 반영 등
	③ 기후보호격차1)의 감소	유럽보험연기금청(EIOPA)과의 협력을 통한 금융상품 개발, 역내 자연재해 보험 촉진 등
	④ 물의 지속가능성 확보	제품의 절수 요건 강화, 지속가능 토지이용계획 촉진 등

주: 1) 기후 관련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 중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비중
2)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정의, 판별하기 위한 EU의 과학적·기술적 기준
자료: EC(2021.2), "Forging a climate-resilient Europe: The new EU strategy on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 EU는 기후변화의 연쇄효과가 미치는 사회·경제·생태계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 행동을 강화할 계획임.

국제 농업 정보(2021. 12.): 유럽

- 파트너 국가의 기후적응 계획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의 수립·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대외활동을 강화할 예정임.

- 또한, 역내 기금, GCF, 기후변화적응기금(Adaptation Fund)[4] 등 국제기금 활용으로 기후적응을 위한 글로벌 기후금융 확산 및 민간투자를 유인할 것으로 기대함.

신 EU 기후적응 전략은 유럽 그린딜과 병행 운영되며, EIB의 향후 금융지원 계획에도 반영

■ EU는 동 전략이 건축, 생태계, 식품, 산업(순환경제) 등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의 분야별 정책과 긴밀이 협력하여 이행되도록 지원할 예정임.

-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 EIB)도 2020년 11월 발표한 '기후은행 로드맵 2021-2025'에서 EU의 기후은행으로서 기후적응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의지를 표명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1.11.29.).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2021-2027 공동농업정책의 채택 과정[5]

■ 2021-2027 공동농업정책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Pillar 1과 Pillar 2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채택 및 승인 과정에 있음.

-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적용될 공동농업정책을 입안하는 과정 중 총회 투표를 거쳐 현재 유럽연합이사회, 유럽연합의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참여하는 협의회[6](trilogue)까지 통과함.

- 공동농업정책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두 개의 축으로 구성됨. Pillar 1은 유럽연합의 예산으로만 진행되는 직불금과 농산물 시장 관리를 의미, Pillar 2는 유럽연합뿐만 아니라 회원국들이 같이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주로 농촌개발에 사용되는 예산임.

- 직불금 제도는 기본직불금(면적 기준, 녹색 직불금 및 청년농직불금 포함)과 자발적 참여직불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4) 2001년 설립된 국제기금으로, 교토의정서에 입각하여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적응에 금융지원함.
5) 유럽의회조사처의 "CAP strategic plans"(2021.11.11.)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https://www.europarl.europa.eu/thinktank/).
6) 공동농업정책이 승인되는 과정은 집행위원회의 제안부터 채택까지 총 10단계로 구성됨. 협의회(trilogue)는 8번째 단계로, 앞으로 총회(plenary)에서의 승인과 채택의 2단계가 남음.

국제 농업 정보(2021. 12.): 유럽

■ 공동농업정책의 개정안은 직불금 강화,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지원 강화, 기후변화 대응 강화 등을 골자로 하여 제안됨.

- 2021년 6월, 유럽연합의회에서 공동농업정책 개정안[7]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2030 Farm to Fork Strategy, 생물다양성 전략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성됨.

- 유럽연합의회(2021.6.28. 발표한 "EU farm policy reform")에 따르면, 중소규모 농가에 대해 국가별 직불금을 최소 10% 보장, 농가별 직불금 규모는 최소 6만 유로에서 최대 10만 유로, 농촌개발 사업 예산 중 최소 35%는 환경 및 기후변화 관련 정책으로 사용, 최소 25% 직불금 예산을 eco-scheme으로 활용 등이 있음.

- 회원국별 공동농업정책 전략 및 계획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각 회원국은 유럽연합의 공동농업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함.

- 회원국별 계획은 2022년에 의결될 예정이며, 최종적으로 새로운 공동농업정책은 2023년 1월 1일자로 발효될 것으로 보임.

■ 2020년 7월에 제출된 예산안이 통과되었으며, 2021년부터 2027년까지 공동농업정책에는 약 3,493억 유로가 투입될 것임.

- 2018년 5월 처음 제안된 공동농업정책 예산은 3,240억 유로(2018년 기준)이었으며,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인하여 2014~20년의 예산안과 많은 차이가 발생함. 이로 인해 유럽연합 27개국의 공동농업정책 예산은 12% 감소하였고, 특히 Pillar 2에 속한 정책들에 대한 예산은 25~28%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 2020년 7월에 유럽연합 지도자들은 2021년부터 2027년까지의 다년간 지출 예산에 대해서 총 1조 743억 유로(2018년 기준)을 투입하기로 합의했으며, 이 중 공동농업정책[8]에 배정된 예산은 3,493억 유로임.

- 공동농업협정의 예산 중에 2,586억 유로는 직불금과 시장 관리에 배정되었으며, 853억 유로는 농촌개발에 배정됨.

※ 2021년 6월에 발표된 공동농업협정에 관한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럽연합의회에 게재된 "EU farm policy reform: Parliament and Council strike a deal"(2021.6.28.)을 참조 바람.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1.11.29.).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7) 유럽연합의회에 따르면, 2021년 6월에 발표한 개정안은 ① 유럽연합 농가들의 환경적 성과 개선, ② 소규모 농가, 청년농, 더 나은 근무환경을 위한 지원 강화(중소농가에 국가 직불 예산의 10% 배정), ③ 농가의 리스크 및 위기관리 지원, ④ 투명한 재정 보호와 반복되는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다룸.

8) 공동농업정책은 Heading 3: 천연자원과 환경 부문에 속함.